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

결정 요인 분석

-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를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연 주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

결정 요인 분석

-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를 중심으로 -

차 경 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연 주

認 准 書

김연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조기은퇴자의 증가로 은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은퇴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충분한 노후재정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의 은퇴는 개인 및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회적으로 은퇴노인의 빈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를 지연시켜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중·고령 근로자 스스로 노후소득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고령 근로자 및 조기은퇴자들이 점진적인 은퇴과정을 통해 은퇴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점진적 은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친 은퇴자들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친 은퇴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중·고령 근로자들이 은퇴경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2005)를 사용하여,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친 은퇴자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친 은퇴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생애직업 특성을 비교하고, 점진적 은퇴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통계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 및 카이제곱 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더욱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공적이전소득 수준은 더 높았으나, 사적이전소득 수준은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더 높았고,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순자산 규모가 점진적 은퇴경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더욱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생애직업에서 기능원·단순노무직종사자의 비중이 높았고,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생애직업에서의 평균 근속년수가 짧고, 임금수준도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애직업에서의 근로환경은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더욱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중·고령 근로자들이 은퇴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50대보다 60대와 70대 이상이, 공적이전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생애직업에서의 임금수준과 생애직업 종료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현재 부채 총잔액이 많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경제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 후 경제구조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보장에 취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고령 근로자들이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은퇴 후 부족한 노후재정마련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이 생애직업 이탈 후 연결직업의 지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은퇴시기를 지연시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환경 마련과 정책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5
II. 선행연구고찰	6
1. 은퇴의 개념	6
2. 한국 중·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결정	8
3. 은퇴의 경로	15
1) 은퇴경로와 은퇴의 유형	15
2) 은퇴경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16
3)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문제	24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25
1) 은퇴자 선정	25
2) 은퇴경로 분류	26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29

IV. 연구결과	3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2
2.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비교	37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37
2) 경제적 특성 비교	39
3.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일자리 특성	41
1)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career job) 특성 비교	41
2)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특성	43
3)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간 산업·직업·고용형태의 이동 분포	45
4.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V. 결론 및 제언	53
1. 요약 및 결론	53
2. 제언	56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3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표 3> 조사대상자의 일자리 특성.....	35
<표 4>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38
<표 5>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제적 특성 비교 : 보유자 평균.....	40
<표 6>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career job) 특성 비교.....	42
<표 7>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특성 비교.....	44
<표 8>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산업 이동 분포.....	46
<표 9>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직업과 고용형태 이동 분포.....	48
<표 10>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52

I. 서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문제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의 지속적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국가의 잠재성장률 저하 및 국가재정의 악화 문제이다. 즉,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동투입이 감소하며,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인구의 노후화로 인해 노동공급의 절대적인 규모와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 인구는 2007년 2,082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매 10년마다 200~3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국민일보, 2008). 또한,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이 감소하고, 자본투입 자원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은퇴 전 보유하고 있던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은 감소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고용불안으로 발생한 조기은퇴의 증가 문제는 개인과 가계 및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보장 기여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함과 동시에 노령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보장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재정 부담은 후세대에 전가되어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개인과 가계 차원에서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로 은퇴 후 노후생활은 점차 길어져 가고 있는데 반해 개인의 노동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조기은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욱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은퇴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중·고령 은퇴자의 증가는 개인과 가계 및 국가의 노후보장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은퇴자가 겪게 되는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개인과 국가의 연금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은퇴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가경제의 경쟁력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퇴자 스스로도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령 은퇴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에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수준의 감축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의 은퇴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을 장려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방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은퇴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환경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은퇴 및 은퇴과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 고령화와 은퇴문제가 국가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도 사회 각 층에서 은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함께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은퇴경로 및 은퇴유형의 다양화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령차별에 따른 고용 기회 부족, 직업 활동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은퇴과정의 불평등과 같은 은퇴의

계층화 현상에 주목하고, 비자발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재무, 소비자학 및 경제학 분야에서는 은퇴자의 소비 및 가계경제구조, 은퇴재무설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등 은퇴 후의 재정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고령화문제에 직면한 서구 산업 국가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은퇴로 인한 연금 재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의 시기와 결정요인, 점진적인 은퇴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생애직업(career job)에서 바로 완전은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를 거치는 은퇴경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장지연, 2003).

과거 은퇴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이론은 ‘전통적 은퇴이론’과 ‘근대적 은퇴이론’이다. ‘전통적 은퇴이론’은 은퇴를 생애직업에서 노동시장의 영구적 이탈로 이어지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았으며, ‘근대적 은퇴이론’에서는 은퇴를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호에 따른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아왔다(박경숙, 2003). 그러나 은퇴에 대한 과거 이론들은 은퇴를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중·고령자들의 은퇴를 심층분석한 최근의 연구들은 은퇴를 점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은퇴는 전통적 또는 근대적 은퇴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해내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과 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진적인 은퇴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근로자들이 점진적 은퇴과정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동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로환경에서는 정년제,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퇴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중·고령자가 생애직업에서 은퇴한 후에는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근

로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 혹은 경제활동참가의 영구적인 철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권문일, 1996). 실증 선행연구(장지연, 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나 농업종사자에 비해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여러 가지 연결직업을 통해 은퇴유형을 택하는 경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 점진적 은퇴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은퇴과정에 있어, 생애직업에서 안정된 노동경력 이후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는 은퇴과정을 거치는 근로자들과 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거쳐 은퇴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전자를 ‘전통적 은퇴경로’, 후자를 ‘점진적 은퇴경로’라고 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주로 어떠한 은퇴경로를 거치고 있으며, 상이한 은퇴경로를 경험하는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직업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은퇴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 이탈을 경험해가는 동태적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전통적 은퇴경로를 경험하는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치는 집단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산업, 직종, 취업형태에 있어 각각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은퇴경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은퇴자들의 상이한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경제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은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점진적인 은퇴경로에 대한 지원방안 및 중·고령 은퇴자들의 노동력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중·고령 은퇴자들의 은퇴 후 생활수준 향상 및 은퇴자 가계의 재정적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급속한 고령화와 조기은퇴의 증가 등으로 인해 중·고령 은퇴자의 노동참여 활성화, 점진적 은퇴과정의 지원, 은퇴 및 은퇴 후 노후생활보장방안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중·고령 은퇴자의 은퇴과정에서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나, 주로 은퇴시기 및 은퇴가능성 예측, 퇴직 후 노동시장 참여 결정요인, 패널데이터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경력 고찰 등에 집중되어 있고, 완전히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은퇴경로를 거쳐 은퇴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완전히 은퇴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경로를 전통적 은퇴경로(생애직업에서 직접 은퇴)와 점진적 은퇴경로(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거쳐 은퇴)로 분류한 후, 각 은퇴경로 집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퇴경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은퇴경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은퇴자들의 다양한 은퇴유형을 모색함과 동시에 점진적 은퇴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하는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하는 집단 간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생애직업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career job)과 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bridge job)의 특성을 비교하며, 특히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의 산업, 직종, 고용형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은퇴자들이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의 개념

은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와 ‘퇴직’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퇴직(退職)’은 ‘현직에서 물러남’을 뜻하며, ‘은퇴(隱退)’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즉, 퇴직은 단순히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고, 은퇴는 근로활동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외 연구들에선 ‘retirement’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퇴직’보다는 ‘은퇴’의 개념에 더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은퇴경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퇴직’보다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노동시장을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하는 ‘은퇴’의 개념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마다 은퇴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하나의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은퇴 상태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연구대상과 연구 결과들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권문일(1996)은 퇴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퇴직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퇴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퇴직을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경제활동 철회’로 정의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 물러나 노동시장을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상태로 정의하였으므로 이를 은퇴 결정기준으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퇴직을 측정하는 방법은 ①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방법, ②경제활동참가여부에 따른 정의, ③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따른 정

의, ④생애 주된 일자리(career job)중단과 관련된 정의, ⑤연금수급에 따른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 김지경(2004)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은퇴 사유와 확대되고 있는 은퇴자 연령범위를 고려하여 은퇴자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은퇴의 결정기준은 연령으로 관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과 함께 연금수급여부, 경제활동참가여부 등이 은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했다. 이정원(2006)은 은퇴란 경제활동 또는 사회활동이 있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향후 본격적인 재취업의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업차원, 주관적 평가 차원, 연령차원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은퇴에 관해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한국노동패널데이터나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부가조사를 사용하고 있다(박경숙, 2001, 2003; 장지연, 2002; 김지경, 2004; 안중범&전승훈, 2004; 이정원, 2006 등).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국노동패널데이터나 중·고령자부가조사에서 정의한 ‘은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은퇴상태는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조사당시 시점에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은퇴에 관해 연구한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Quinn(1981)은 은퇴 구분을 ‘완전은퇴/부분은퇴/은퇴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응답자들이 스스로 이 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동시에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에 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스스로 은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9%정도가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었고, 완전히 은퇴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응답에 따른 은퇴여부와 현재 소득활동 상태에 대한 객관적 응답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uhm(1990)의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측정에 따른 ‘은퇴/부분은퇴/비은퇴’ 개념과 소득수준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응답자들을 완전은퇴자와 부분은퇴자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에서는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측정뿐만 아니라 현재의 은퇴상태를 Quinn(1981)의 연구에서처럼 ‘완전은퇴/부분은퇴/은퇴하지 않았다’로 측정하고 있어 응답자의 은퇴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및 주관적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은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은퇴에 관한 다양한 정의 중 어떠한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은퇴를 어떠한 ‘상태’로 간주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진입부터 노동활동의 영구적인 중단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은퇴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참가로부터의 철회’ 개념과 Quinn(1981)의 연구에서 사용한 ‘완전은퇴’의 개념을 사용하여 은퇴상태를 측정하였다.

2. 한국 중·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결정

유럽연합(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의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69.3%로 일본(72.2%), EU 15개국(70.8%)과 비슷한 편으로 나타났다. 은퇴 당시 월평균 급여는 남성의 경우 54세 이하는 117만 7천원, 55-59세는 159만 5천원이었으며, 여성은 각각 59만 9천원, 67만 7천원으로 남성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은퇴자의 노후소득원은 자녀·친지로부터의 도움이 56.6%, 근로소득 26.6%, 자산소득 9.4% 순으로 은퇴자들의 노후생활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원 중

공적연금이 55.5-77%에 이르고 자녀·친지로부터의 도움은 1.7-13.3%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원은 사적 이전소득의 기여분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2006).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 결과에서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 실업률은 2.1%로 나타났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은 20년 9개월이었으며, 그 일자리를 그만 둔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4세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고령자의 평균근속기간이 23년 5개월로 여성 근로자(18년 3개월)보다 5년 2개월 더 길게 나타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연령을 살펴본 결과 50대에 그만 둔 경우가 43.5%로 가장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이직자의 평균 연령은 만 55세, 여성은 만 52세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7.5%)', '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 및 폐업(19.2%)', '가족을 돌보기 위해(13.9%)'순으로 나타났다. 55~79세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31.8%,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26.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38.0%, 농림어업직 29.9%로 나타났다.

방하남 외(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제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자료(2003)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활동을 살펴본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약 50% 정도는 50대 중반 이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근로자의 약 69%, 여성근로자의 약 67%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는 평균 52.3세, 비임금근로자는 평균 56.5세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을 조사한 결과 남성근로자의 경우 50%이상이 58세(임금근로자), 59세(비임금근로자) 이전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54세(임금근로자), 59세 전후(비임금근로자)

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평균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1차 퇴직 후, 비교적 긴 시간동안 제 2의 근로생애(평균 14년)를 거쳐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중·고령자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고령 근로자들의 은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혼인여부, 건강상태, 교육수준, 직업, 피부양자수, 자녀수, 소득, 자산, 연금 등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객관적 요인들과 직무 만족도, 노동에 대한 압력, 직장에서의 은퇴압력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 총 사회보장지출, 비사회보험 이전지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육체계의 변화, 기술 발달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연령별 및 성별 분포, 노인에 대한 노동수요의 변화, 사회전체의 실업률 같은 거시적 요인들이 있다.

한편 근로자들의 은퇴를 노동공급모델에 근거하여 중·고령 근로자들의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동력공급결정요인과 노동력수요결정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노동력공급은 이들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과 시장임금(market wage)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임금은 개인의 경력, 학력, 기술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고, 유보임금은 재산소유나 다른 소득원 여부와 같은 소득효과, 가사노동과 같이 임금근로를 대체할 다른 역할의 존재 여부 등과 관련된다. 노동력 수요측면에서 보면 임금결정체계의 연공급적인 성격의 비중과산업과 직업의 특수성으로 반영되는 경기와 기술변화 등이 은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장지연, 2002; 방하남 외, 2005).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자산 및 부채, 직업적 특성, 연금, 피부양자수 등의 변수가 은퇴 결정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과 은퇴결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은 은퇴의 가능성과 긍정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재취업실태를 조사한 이상호(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은퇴의 비중은 감소하고, 완전은퇴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1세 증가할수록 은퇴가능성은 1.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은퇴가능성과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승렬 & 최강식(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할 확률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은퇴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Fullerton(1999)은 고령의 여성근로자들은 고령의 남성근로자에 비해 은퇴의 가능성이 낮음을 발견하였고,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도 45세 이상 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은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은퇴시기가 가장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55세 이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연령기에 취업상태에 머무는 기회가 유의하게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들마다 연구의 대상연령이 다르고, 단순한 성별의 영향보다는 성별에 따른 은퇴사유 및 직업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성별에 따른 은퇴자의 은퇴사유를 분석한 김지경(2004, 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은퇴연령이 각각 58.3세와 55.2세로 성별에 따라 평균 은퇴연령에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은퇴사유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은퇴사유로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정년퇴직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족원 돌보기/가계의 여유 또는 여가 순으로 은퇴사유가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 건강상의 이유/정년퇴직/권고사직 및 명예퇴직 순으로 주된 은퇴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의 여건에 기인하여 은퇴를 하는 성격

이 강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여건에 기인하여 은퇴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은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은퇴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의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Schwab, 1987; 권문일, 1996에서 재인용), 두 번째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장지연, 2002; 이승렬 & 최강식, 2007). 첫 번째 견해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이 연금보장이나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더 큰 개인은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여 은퇴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결과이다. 이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은퇴하는 대신 부분은퇴를 선택하여 근로를 지속하게 한다고 밝힌 Hayward & Hardy(1985)의 연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견해는 높은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갖게 하고, 높은 임금수준에 따라 연금 및 개인의 은퇴자산을 증가시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반된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교육수준 자체보다도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이나 소득, 연금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건강악화가 은퇴결정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건강악화는 근로에 장애를 가져오고, 생산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Parnes & Nestel, 1975; Boskin & Hurd, 1978; 권문일, 1996에서 재인용).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근로자보다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일수록 완전은퇴 및 부분은퇴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2004, 2005)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모두 주된 은퇴사유 중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도 역시 건강상태는 은퇴가

능성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측정과 관련한 우려(예를 들면, 은퇴자가 스스로 건강상태의 악화를 은퇴의 이유 정당화할 가능성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가 많지만, 건강상태를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측정했는가에 상관없이 건강은 은퇴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장지연, 2003).

소득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을 할 여력이 많아 가계자산의 축적수준을 높여 은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산의 축적을 이루지 못하여 계속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이다(Kim & DeVaney, 2005). 두 번째 견해는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수준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yant, 1990; Honig, 1996; Kim & DeVaney, 2005에서 재인용; 이승렬 & 최강식, 2007). 또한 소득을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근로를 중단하고 여가시간을 늘릴 경우의 기회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대체효과가 작용하여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소득과 은퇴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소득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견해에서는 현재의 소득수준이 은퇴 후의 재산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서는 현재의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소득이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유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이 많을수록 여가를 비롯한 더 많은 재화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은 순수한 소득효과를 통해 퇴직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권문일, 1996). 높은 수준의 자산과 낮은 수준의 부채는 여가시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가계자산을 가진 근로자는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Bryant, 1990; Hatcher, 2002; Kim & DeVaney, 2005에서 재인용).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은 은퇴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소유여부는 은퇴 가능성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축적된 자산은 은퇴 후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자산은 은퇴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처럼 자산의 유형에 따라 은퇴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직종, 업종 등과 같은 직업적 특성 역시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근로자의 직종, 업종의 특성으로 인한 직업안정성과 직무만족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노동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직업에 대한 심리적 특성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직업안정도가 높을수록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임시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은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은퇴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취업형태가 은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리직·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육체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시간, 노동노력 등과 관련한 노동계획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소득조사를 회피할 여지가 많고, 따라서 그만큼 계속 노동력에 머무를 수 있는 매력이 증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Hardy, 1980; 권문일, 1996에서 재인용). 한편, Honig(1996)은 직업만족도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조기 은퇴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제도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연금은 은퇴자들에게 비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산수준을 높여줌으로써 대체효과를 통해 그들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와는

달리 연금의 가입으로 인해 추가적 근로에 대한 조세부담이 생겨 이는 여가의 기회비용을 떨어뜨리는 소득효과로 작용하여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기업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완전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승렬 & 최강식(2007)의 연구에서는 기대연금자산이 증가할수록 은퇴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배우자 존재여부, 자녀수 등이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피부양자의 유무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은 배우자나 피부양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재정적 자원에 대한 욕구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적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Myers, 1991; 권승, 황규선, 2004에서 재인용; 이승렬 & 최강식, 2007).

3. 은퇴의 경로

1) 은퇴 경로와 은퇴의 유형

전통적인 은퇴경로(traditional retirement)는 전일제 경력직(full-time career job)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영구적 이탈 즉, 단 한 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완전히 은퇴하는 형태였다.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한 초기의 은퇴연구는 은퇴와 비은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Retirement History Study(RHS)를 사용한 연구들은 다수의 고령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해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비전통적인 은퇴경로와 다양한 은퇴유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Quinn, 1996). 점진적인 은퇴경로(gradual retirement)는 전통적 은퇴경로와는 달리 전일제 경력직 이후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전일제 경력직에서의 시

간제(part-time)근무나 전일제 경력직과는 다른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연결직업(bridge job)은 평생직장이탈 이후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연결해 주는 직업들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이현기, 2003). Ruhm(1990)은 연결직업에서의 산업과 직종은 대부분 평생직장(career job)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은퇴경로에 따른 은퇴유형을 완전은퇴와 부분은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완전은퇴(full-retirement)는 부분은퇴(partial-retirement)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상태를 의미한다. 부분은퇴는 평생직장(career job)을 그만두는 일종의 일전이 형태의 하나로, 은퇴행위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이직행동과는 다르다(이현기, 2003). 부분은퇴는 전일제 경력직(full-time career job)에서 바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쳐 은퇴하거나, 이전 직업에서의 노동력 혹은 임금의 현저한 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근로자에 있어 근로를 지속하고 싶은 욕구나 혹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근로를 의미할 수 있다(Kim & DeVaney, 2005). 이와 같이 부분은퇴는 생애직업으로부터 최종은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거친다는 점에서 점진적 은퇴경로에 포함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은퇴경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박경숙(2001)의 연구에서는 고연령층이 경험하는 은퇴과정의 다양성과 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 노동패널 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55세 이상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을 유형화한 후, 고연령기에 이르기까지 노동이동 과정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기의 종사상 지위와 이직 경험이

고연령기에서의 취업활동 및 종사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숙(2003)은 또 다른 연구에서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하여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동일 직업 지속형/ 직업이동형/ 완전비취업형/ 반복 비취업형으로 크게 4가지로 일자리 이동이 유형화 되었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몇 가지 은퇴 경로를 구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①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경력 이후 정년제나 연금보장제도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한 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은퇴 유형, ② 고소득 자영업처럼 공식적인 은퇴정년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노후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은퇴 유형, ③ 자녀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유형, ④ 개인자산이나 연금자산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형, ⑤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유형으로 은퇴유형을 구분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령자 중 일부는 안정된 고용경력 이후 소득보장과 함께 은퇴하는 ‘전통적 은퇴 이론’을 따르고 있었고 이러한 은퇴경로는 주로 관리행정 및 전문직에 종사했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가구소득 수준이 상위 10%에 속하는 고령자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었다.

장지연(2003)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사건사분석을 통해 45세 이상 취업자의 경력이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동시장은 자영업과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직접적 전환과 비슷한 비율로 근로시간 단축 경로를 통해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미취업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임시직이나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임시일용직이나 자영업이 정규직 임금근로에서 대안적 은퇴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정(2006)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3~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 및 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고령근로자의 약 1/4은 점진적 퇴직이행과정을 밟고 있었고, 퇴직을 포함하여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이 중·고령자가 퇴직 후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지속기간이 대부분 1~2년으로 매우 짧고,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기(2003)는 미국의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Older Men)데이터를 사용하여 55세-61세 남성의 경력마감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적으로 은퇴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마감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 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가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uhm(1990)은 RHS(Retirement History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은퇴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약 40%는 평생직장으로부터 직접 최종은퇴했고, 응답자의 50%는 노동경력의 한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은퇴했고, 25%는 첫 은퇴 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4은 최종은퇴 전까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연결직업을 보유했음을 밝혀냈다. 또한 연결직업을 거친 응답자의 75%는 산업이나 직종을 변경하였고, 약 50%는 산업과 직종을 모두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Quinn(1996)은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조사대상자들의 49세 이후의 경력이동 형태를 살펴봐왔는데, 그 결과 77%의 응답자들이 1994년에 전일제 경력직업에 머물고 있었으며, 14%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나머지는 새로운 전일제 직업이나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 전일제 경력직업에서 벗어나 1994년 연결직업에 머무는 가능성에는 연령, 자영업, 교육수준, 자가소유여부, 미성년 자녀의 존재, 기업연금, 건설업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에 관해 분석한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은퇴과정이 노동시장에서 단 한 번의 은퇴로 전환되거나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은퇴는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의 다양한 변화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몇몇 연구들은 근로시간 단축 경로를 통한 은퇴 유형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3)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퇴경로 및 은퇴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자산·부채, 직종 및 고용형태 등과 같은 직업적 특성 및 연금가입여부, 피부양자수 등이 있다.

① 연령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은퇴유형 선택 및 은퇴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의 영향력은 선행연구들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완전은퇴 및 부분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지연(2003)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상태의 노동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은정(2006)의 연구에서는 평

균 연령에서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점진적 퇴직이 발생할 확률이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가능성 및 신체능력, 근로욕구, 재정적 필요 등이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을 위한 근로활동이 어려워, 경제활동참가율과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는 완전퇴직자에 비해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퇴직보다는 완전퇴직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경력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50세~57세의 근로자들이며, 58세~62세의 근로자들의 경우 연결직업으로의 이동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별

박경숙(2003)은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살펴본 결과 직업 이동분포와 직업 배열의 이질성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직업 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고령자는 자영업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장기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고령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장기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근로자들은 부분은퇴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 근로자들은 은퇴보다는 전일제 근로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경력이동을 살펴본 장지연(2003)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실업의 경로를 통해 전일제근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은 데 비해, 비경제활동이나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은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이미 은퇴한 사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쳐 은퇴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은퇴경로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력의 방향성은 연구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보다는 부분은퇴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Quinn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경력직에서 완전은퇴로의 직접적 전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의 고학력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비경제활동 상태나 근로시간 단축의 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교육수준이 점진적 은퇴경로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전일제 근로에서 완전퇴직의 전형적 퇴직과정을 거친다는 연구결과(Flippen, 2005)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점진적으로 퇴직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지은정, 2006)도 있었다.

한편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과 종사상 지위 배열의 동질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고령자에서의 직업 배열 동질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농어업 분야의 장기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규직 임금근로자에서의 장기 유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건강상태

박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근로자가 그렇지 못한 근로자에 비해 다양한 경력이동을 보이며, 장기간 비취업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도 건강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퇴직 후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기(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건강한 중·고령근로자는 55세의 직업에서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55세의 직업을 떠나더라도 다시 전업하는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Sammmatino(1987; 권문일, 1996에서 재인용)는 건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건강 악화가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변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떨어뜨려 시장임금을 감소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여 경제활동참가를 철회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⑤ 소득·자산·부채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은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체효과로 작용하여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Quinn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자산 측면에서 상위와 하위에 분포하는 사람이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빈곤층에 있는 경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계속근로를 하게 되며, 부유층에 속하는 경우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헌신으로 계속근로를 선택하게 된다.

⑥ 직업적 특성

Quinn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직종과 업종에 따라 은퇴시기 및 은퇴유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종에 따라서는 농업과 개인서비스 분야의 50%이상, 건설업과 소매업 종사자의 40%이상이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치지 않았다. 직종에 따라서는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근로자의 1/3은 한 번에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전일제근로에서 완전은퇴로 곧바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그들의 경력 직업(career job)에 머무를 가능성은 더 높았고, 연결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

DeVaney(2005)의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일제근로보다는 부분은퇴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연금

권문일(1996)의 연구에서는 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액이 클수록 퇴직 후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확정기여형(DC)연금이나 확정급여형(DB)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에 미가입한 응답자에 비해 그들의 경력직업을 벗어날 가능성과 연결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⑧ 피부양자수

권문일(1996)은 대졸자녀수가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대졸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비지출 부담이 높아 노후를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적 자원축적 여유가 없고 이에 따라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Quinn(1996)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경력직업을 이탈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결직업으로 이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생애 직업에서 직접 은퇴)’를 통하여 은퇴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거쳐 은퇴)’를 통해 은퇴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생애직업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은퇴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은퇴경로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이한 은퇴경로를 선택하는 중·고령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일자리 특성은 어떠한가.

[2-1]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 특성은 어떠한가.

[2-2]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 및 연결직업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1차년도(2005년)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이 자료는 만 50세 이상의 가구원을 가진 전국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 중·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퇴직, 건강, 가족관계, 노후보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직업으로부터 이탈하여 완전 은퇴에 이르는 경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노후보장패널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몇 단계의 작업이 요구되었다. 먼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정한 ‘은퇴자’의 개념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선정한 후, 이들의 근로경험을 토대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은퇴자 선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립한 은퇴의 개념 및 은퇴상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은퇴’라는 개념은 생애 동안 근로 및 소득활동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생애 동안 1년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자료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둘째, ‘은퇴’는 현재 노동시장을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최근 2개월 동안 수입이 되는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자료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은퇴’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은퇴여부를 묻는 자기응답식 문항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현재 은퇴

상태를 묻는 문항은 ‘완전히 은퇴하였다’, ‘부분적으로 은퇴하였다’, ‘은퇴하지 않았다’중 한 가지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제활동 비참여’라는 두 번째 기준과 배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은퇴하였다’라고 응답한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위의 3가지 기준에 따른 ‘은퇴’ 개념을 적용하여 3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응답자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생애 동안 1년 이상 근로 및 소득활동이 있었고, ② 최근 2개월 동안 수입이 되는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③ 현재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 및 소득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있으며, 찾을 의사가 전혀 없는 자’ 이다.

2) 은퇴경로 분류

① 생애직업(career job) 정의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애직업이후의 근로경력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5)에서는 은퇴자들의 생애 근로 경험 유무,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 및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에 관해 질문하고 있지만, 그 일자리들이 생애직업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생애직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Quinn & Burkhauser(1990)는 10년 이상 고용되었던 일자리를 ‘main job’으로 보았고, Ruhm(1990)은 일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일자리를 ‘career job’으로 정의하였다. 이현기(2003)는 고령노동자가 보유했던 직업 중 적어도 10년 이상 일한 직장을 ‘평생직장(career job)’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05)에서는 현재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생애 근로경력 유무, 마지막 일자리 및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은퇴자의 경우에는 직업이동 경력 없이 은퇴를 했으므로 마지막 일자리를 생애직업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러나 마지막 일자리 이전에 근로 경력이 있다고 응답한 은퇴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의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응답자들로만 제한하여 생애직업을 정의하였다.

②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분류

앞서 정의한 ‘생애직업(career job)’ 이후의 근로경험을 통해 ‘전통적 은퇴 경로’와 ‘점진적 은퇴 경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즉, 마지막 일자리 외에 다른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설문문항 상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는 ‘마지막 일자리’가 곧 생애직업을 의미하며, 생애직업에서 직접 은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통적 은퇴 경로’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마지막 일자리 외에 다른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설문문항 상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는 생애직업 이후 다른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쳐 은퇴한 것으로 판단하여 ‘점진적 은퇴 경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단, 연결직업에서의 근로경력이 있는 ‘점진적 은퇴 경로’ 집단의 경우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에 마지막 일자리로의 이동이 은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한 이직일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몇 세 이후의 경력이동을 은퇴과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했다. 은퇴를 향한 경력이동을 판단하는 기준연령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하였는데, 중·고령자의 은퇴과정과 경로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중·고령자의 경력이동에 대해 연구한 장지연(2003)의 경우 만 45세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면서 45세 이후의 경력이동을 모두 은퇴로 개념화하기 어렵지만 은퇴로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였고, 중·고령자의 퇴직전환과정을 살펴본 지은정(2006)은 퇴직과정 분석에 있어 한국의 조기퇴

직경향과 평균 퇴직연령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연령을 만 50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박경숙(2001, 2003)은 노동이탈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방하남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임금근로자가 52.3세, 비임금근로자가 56.5세 인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2006)에서는 평균적으로 만 54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적용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은퇴시점에 가까운 만 50세 이후에 마지막 일자리 직전 일자리를 벗어나 마지막 일자리의 경력이동을 한 경우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10년 이상 근무한 일자리(생애직업)에서 50세 이후에 마지막 일자리(연결직업)로 이동한 후 최종은퇴에 이른 은퇴자들로 정의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은퇴자는 총 1,045명이고 이중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780명,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265명이었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친 집단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 집단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상이한 은퇴경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 검증, t-검증, ANOVA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배우자유무,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다.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간총가계소득과 연간총가계지출은 가구단위로 조사되었고, 규모는 조사시점의 이전 년도(2004년) 연간 총액으로 측정되었다. 유형별 소득(금융·부동산·연금·기타소득)과 자산 및 부채 변수는 부부단위로 조사되었고, 규모는 조사시점의 이전 년도(2004년) 연간 총액으로 측정되었다. 먼저 소득은 재산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으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출은 가구단위로 측정된 자료밖에 존재하지 않아, 연간총가계지출로만 살펴보았다. 자산은 총자산(금융자산+부동산자산) 및 순자산(총자산-총부채)으로 살펴보았는데, 금융자산으로는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보험, 신탁),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주식투자 자금, 회사채 및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 및 아직 타지 않은 쟁돈, 기타 금융자산의 총액을 포함시켰고, 부동산자산으로는 거주주택, 주택 외 부동산, 사업체의 자산가치의 총액을 포함시켰다. 부채는 총부채 잔액을 통해 살펴보았다.

일자리 특성으로는 생애직업의 산업, 직종, 고용형태, 근속년수(근무 종료시점-근무 시작시점), 직업 종료 당시 연령, 월평균임금(그만두기 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세전임금)을 살펴보았으며, 점진적 은퇴 경로를 거친 집단에

대해서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에 있어, 산업·직종·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은퇴 경로와 점진적 은퇴 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전통적 은퇴 경로를 선택했는지, 점진적 은퇴 경로를 선택했는지의 이분변수이고, 독립변수는 위에서 언급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일자리 특성 등이다.

분석에 사용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여성	
	연령	조사시점(2005) 당시의 만 연령	
	교육수준	무학/초졸/중·고졸/대졸 이상	
	가구원수	전체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	있음/없음	
	건강상태	10점 척도 및 상/중/하	
경제적 특성	소득	재산소득	예·적금이자, 국·공채권 이자, 주식 등의 배당금, 주식 매매차익, 사적으로 빌려 준 돈에 대한 이자 등의 연간총액
		부동산소득	집세(월세), 집세 제외한 각종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권리금 차익, 기타 부동산 소득 등의 연간총액
		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부터의 연간 총 소득액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상속/증여받은 현금이나 현물, 기타 등의 연간 총액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급여 연간 수령총액(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 제수당)
		사적이전소득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현물지원 등의 연간 총액
	지출	연간가계총지출	

<표 1> 계속

경제적 특성	자산	총 자산	금융자산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개인연금 불입총액, 저축성 보험 불입총액, 적립식펀드 납부금, 주식투자 자금, 회사채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사적으로 빌려준 돈, 아직 타지 않은 껌돈 등, 기타
			부동산자산	현 거주주택 자산가치, 거주주택 외의 주택 자산가치, 사업체의 자산가치, 기타 부동산의 자산가치
			기타자산	직접적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트럭, 선박, 버스, 항공기, 농기계, 콘도 및 골프 등 각종 회원권, 귀금속, 그림 등 소장예술품
	부채	총부채 잔액		
일자리 특성	산업	농림어업/광공업/건설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소매·음식·숙박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직업	전문·관리직/사무·판매·서비스종사자/농어업종사자/기능원·단순노무직		
	고용형태	임금근로자/고용주및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근속년수	근무 종료시점 - 근무 시작시점		
	직업 종료 당시 연령	현재 연령-은퇴 후 경과기간(2005년-근무 종료시점)		
	월평균 임금	그만두기 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세전 임금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조사대상자 1,045명 중 남성이 421명으로 전체의 40.3%였고, 여성은 624명, 59.7%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50세부터 94세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50대가 11.2%, 60대가 44%, 70대 이상이 44.8%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68.7세였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30.1%, 초·중졸이 45.8%, 고졸이상이 24.1%로 교육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65.5%,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34.5%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더 높았다. 건강상태는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육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 점수를 합하여 전체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는데, 평균 점수는 5.2점이었다. 또한, 건강상태의 평균 점수 기준으로 상·중·하 세 집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상(22.8%), 중(37.6%), 하(39.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중간이하에 속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를 중심으로 액수와 보유율 및 보유자평균액수를 살펴보았는데, 조사결과 연간 금융소득의 전체 평균은 약 99만원 정도였고, 보유율은 24%로 낮은 편이었으며, 보유자 평균은 약 4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¹⁾

(n=1,045, 단위 = 천원)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인 구 사 회 학 적 특 성	성별	남	421	(40.3)
		여	624	(59.7)
	연령	50대	117	(11.2)
		60대	460	(44.0)
		70대 이상	468	(44.8)
		평균(세)	68.7	(7.6)
	교육수준	무학	314	(30.1)
		초·중졸	478	(45.8)
		고졸이상	251	(24.1)
	가구원수	평균(명)	2.8	(1.5)
배우자 유무	있음	684	(65.5)	
	없음	361	(34.5)	
건강상태 ²⁾	상	238	(22.8)	
	중	393	(37.6)	
	하	414	(39.6)	
	평균(점)	5.2	(1.9)	

변수		구분	전체 평균(S.D)	보유율 (%)	보유자 평균(S.D)	
경 제 적 특 성	소득	재산 소득	금융소득	986.8 (18646.7)	24.0	4108.6 (37935.6)
			부동산소득	1418.3 (7745.8)	19.7	7195.0 (16241.3)
			연금소득	37.2 (514.5)	0.9	4313.3 (3714.6)
			기타소득	1273.1 (14044.1)	2.9	44344.7 (71586.5)
	이전 소득	공적이전 사전이전	공적이전	2176.4 (5775.5)	75.1	2897.3 (6501.2)
			사전이전	3037.0 (4223.4)	77.2	3932.7 (4424.7)
			연간가계총소득	19215.0 (35263.3)	88.7	21660.9 (36727.7)
	지출	연간가계총지출	16103.6 (14164.9)	100.0	16103.6 (14164.9)	
	자산	총 자 산	금융자산	18627.7 (63673.8)	53.6	34760.7 (83727.0)
			부동산자산	173968.6 (309806.8)	81.9	212379.9 (330196.3)
기타자산			3377.1 (12588.4)	38.0	5052.0 (13830.6)	
순자산		175415.8 (310475.9)	90.7	193364.4 (329152.9)		
부채	부채 총잔액	20557.6 (61506.7)	36.9	55654.7 (91105.0)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2) 건강상태는 10점 만점으로 [M±S.D/2]를 기준으로 상(6.16점 이상),중(4.25~6.15점),하(4.24점 이하) 세 집단으로 분류함.

연간 부동산소득의 전체 평균은 약 142만원이었고, 보유율은 19.7%로 역시 낮은 편이었으며, 보유자 평균값은 약 720만원이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보유율이 각각 0.9%와 2.9%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재산소득(금융·부동산·연금·기타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유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평균액수도 많은 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재산소득에 비해 보유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각각 전체 응답자 중 75.1%와 77.2%가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자 평균 액수는 연간 공적이전소득이 약 290만원이었고, 연간 사적이전소득이 약 393만원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주된 소득원은 재산소득보다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연간 총가계소득의 전체평균은 약 1,921만원이었고, 연간 총가계지출 평균액은 약 1,610만원으로 연간 총가계소득이 연간 총가계지출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자산은 조사대상자의 53.6%가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평균액은 약 1,863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3,476만원이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보유율이 약 82%로 금융자산에 비해 보유율이 높았고, 응답자 전체평균액은 약 1억 7천여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2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은 38%정도가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평균액은 약 338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50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전체평균액과 보유자 평균액은 각각 약 1억 7,500만원과 약 1억 9,300만원 이었다. 부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6.9%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평균액은 약 2,055만원, 보유자평균액은 약 5,565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일자리특성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일자리특성으로 생애직업(career job)과 연결직업(bridge job)의 산업, 직업, 고용형태, 근속년수, 직업을 종료할 당시의 평균연령,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았다. 생애직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n=1,045)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고, 연결직업의 경우 연결직업의 근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즉,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n=265)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자리 특성¹⁾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생애직업(n=1,045)	연결직업(n=265)	
일 자 리 특 성	산업	농림어업	383 (36.8)	45 (17.0)
		광공업	116 (11.1)	41 (15.5)
		건설업	62 (6.0)	21 (7.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6 (4.4)	21 (7.9)
		도소매·음식·숙박업	211 (20.3)	47 (17.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23 (21.4)	90 (34.0)
	직업	전문·관리직	132 (12.8)	24 (9.7)
		사무·판매·서비스직	246 (23.8)	30 (12.1)
		농림어업직	350 (33.9)	32 (13.0)
		기능원·단순노무직	305 (29.5)	161 (65.2)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465 (44.5)	180 (67.9)
		고용주/자영업자	336 (32.2)	63 (23.8)
		무급가족종사자	243 (23.3)	22 (8.3)
근속년수(년)		29.4 (16.3)	7.1 (5.4)	
직업 종료 당시 연령(세)		61.6 (7.6)	65.0 (6.3)	
월평균 임금(천원)		1216.4 (1244.3)	1042.7 (1167.9)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먼저 생애직업에서의 산업은 농림어업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4%), 도소매·음식·숙박업(20.3%), 광공업(11.1%), 건설업(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4.4%)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연결직업에서의 산업은 생애직업과는 달리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4%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 17.7%, 농림어업 17%, 광공업 15.5%의 분포를 보였고,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각각 7.9%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산업 분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점진적 은퇴 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산업 분포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에 산업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문제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

생애직업의 직종은 농림어업직이 33.9%로 가장 많았고, 기능원·단순노무직(29.5%), 사무·판매·서비스직(23.8%), 전문·관리직(12.8%)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연결직업의 경우 기능원·단순노무직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림어업직(13%), 사무·판매·서비스직(12.1%), 전문·관리직(9.7%)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중·고령층 근로자 중 상당 비율이 농림어업직과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6) 결과와 일치한다.

고용형태로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연결직업에서는 임금근로자가 67.9%로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나머지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근속년수는 생애직업의 경우 평균 29.4년이였다. 이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이 20년 9개월로 나타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6) 결과에 비해 평균근속기간이 조금 길었다. 연결직업의 평균 근속년수는 7.1년이였다.

각각의 직업을 종료할 당시의 평균 연령을 살펴본 결과, 생애직업은 평균 61.6세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고, 연결직업의 경우 약 65세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각각 평균 약 121만원, 약 104만원으로 나타나 연결직업의 월평균임금수준이 생애직업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비교

본 절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n=780)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n=265)간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친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성별과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성별 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남성이 35.8%, 여성이 64.2%로 여성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남성이 53.6%, 여성이 46.4%로 남성의 비중이 여성의 비중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은퇴한 사람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쳐 은퇴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Quinn(199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분은퇴를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Kim & DeVaney(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은퇴경로 결정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은퇴경로 선택에 미치는 성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의 연령별 분포와 평균 연령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모두 50대보다는 60대와 70대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50대의 비중이

6%로 60대(43.8%)와 70대(50.2%)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60대의 비중이 44.1%로 가장 많았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70대 이상이 50.2%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두 집단 간 평균 연령은 각각 68.3세와 69.7세로 나타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평균연령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생애직업 이탈 후 상대적으로 늦은 연령까지 연결직업을 통해 근로를 지속함으로써, 최종은퇴 시기가 지연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에 교육수준, 가구원수,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¹⁾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t/ X^2	
		전통적 (n=780)	점진적 (n=265)		
성별	남	279 (35.8)	142 (53.6)	26.097***	
	여	501 (64.2)	123 (46.4)		
인구 사회 학적	연령	50대	101 (12.9)	16 (6.0)	10.758**
		60대	344 (44.1)	116 (43.8)	
		70대 이상	335 (42.9)	133 (50.2)	
		평균(세)	68.3 (7.8)	69.7 (6.7)	
교육수준	무학	240 (30.8)	74 (28.0)	3.001	
	초·중졸	345 (44.3)	133 (50.4)		
	고졸이상	194 (24.9)	57 (21.6)		
가구원수	평균(명)	2.8 (1.4)	2.7 (1.5)	-0.908	
특 성	배우자 유무	있음	517 (66.3)	167 (63.0)	.931
		없음	263 (33.7)	98 (37.0)	
건강상태	상 중 하 평균(점)	상	184 (23.6)	54 (20.4)	1.175
		중	291 (37.3)	102 (38.5)	
		하	305 (39.1)	109 (41.1)	
		평균(점)	5.2 (1.9)	5.1 (1.8)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2) 경제적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각각의 소득, 자산 항목별 보유율 및 부채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보유자 평균액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특성은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동산자산, 순자산이었고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간의 이전소득액을 살펴본 결과 연간 공적이전소득액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약 335만원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172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나, 연간 사적이전소득액의 경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약 372만원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457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상호 간에 대체재로 작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액이 비교적 충분하여 사적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지만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불충분하여, 가족이나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연간 가계총소득액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약 2,283만원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1,836만원)보다 소득수준이 높았고, 연간 가계총지출액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약 1,650만원으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1,495만원)보다 지출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연간 가계총소득액과 연간 가계총지출액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형별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자산만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약 2억 3,500만원으로 나타나 약 1억 4,470만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자산액수도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약

2억 1,650만원)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1억 2,41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경제적 특성 차이를 종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 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채액은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소득, 자산 수준은 더욱 높고, 부채 수준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구조의 안정성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제적 특성 비교
: 보유자 평균 (단위 : 천원)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t/X ²
			전통적 은퇴	점진적 은퇴	
경제적	소득	재산소득	4542.7 (41709.1)	2066.0 (5256.4)	-0.393
		부동산소득	5870.4 (8646.7)	11676.0 (29869.1)	1.316
		기타소득	51200.8 (76531.5)	10064.0 (15761.4)	-1.181
	이전소득	공적이전	3348.7 (7213.5)	1723.3 (3881.4)	-4.052***
		사전이전	3720.4 (4235.1)	4572.8 (4908.6)	2.374*
		연간 가계총소득	22831.4 (39136.3)	18366.4 (28705.6)	-1.629
	지출	연간 가계총지출	16508.8 (12812.5)	14945.8 (17440.9)	-1.491
특성	총자산	금융자산	29873.6 (60129.0)	16643.9 (38521.0)	-2.856**
		부동산자산	235276.8 (363047.9)	144706.0 (091192.9)	-4.686***
		기타자산	4323.4 (8390.6)	7400.9 (24053.7)	1.218
	순자산	216454.7 (363134.2)	124093.5 (177768.8)	-5.173***	
	부채	부채 총잔액	54055.0 (83396.0)	60355.9 (111067.6)	.591

1) 각각의 소득, 자산 항목별 보유율 및 부채보유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보유자 평균액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음.

2)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보유율이 0.9%로 매우 낮아, 집단 간 비교는 제시하지 않았음.

3.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일자리 특성

본 절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두 집단의 생애직업(career job)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생애직업과 연결직업(bridge job) 특성을 비교하고,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의 산업, 직업, 고용형태의 변화 구조를 살펴보았다.

1)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생애직업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생애직업 특성은 산업, 직업, 근속년수, 생애직업을 그만 둘 당시의 연령, 월평균 임금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각각 농림어업이 38.1%, 33%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농림어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1%), 도소매·음식·숙박업(18.9%), 광공업(10.5%)순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도소매·음식·숙박업(24.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5%), 광공업(13%)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직업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농림어업직이 35.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기능원·단순노무직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농림어업직 다음으로 기능원·단순노무직(27.1%), 사무·판매·서비스직(23.9%), 전문·관리직(13.5%)순으로 나타났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기능원·단순노무직 다음으로 농림어업직(29.1%), 사무·판매·서비스직(23.6%), 전문·관리직(10.5%)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고용형태의 분포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로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의 분포로 이루고 있었다. 두 집단 간 생애직업에서의 근속년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평균 31.3년,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평균 22.8년을 생애직업에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6)에서 조사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년수인 20.9년보다 길었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생애직업 근속년수는 약 9년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근속년수가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 특성 비교¹⁾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t/X ²	
		전통적 (n=780)	점진적 (n=265)		
생 애 직 업	산업	농림어업	297 (38.1)	86 (33.0)	12.419*
		광공업	82 (10.5)	34 (13.0)	
		건설업	44 (5.6)	18 (6.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0 (3.8)	16 (6.1)	
		도소매·음식·숙박업	147 (18.9)	64 (24.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80 (23.1)	43 (16.5)	
특 성	직업	전문·관리직	105 (13.5)	27 (10.5)	10.990*
		사무·판매·서비스직	185 (23.9)	61 (23.6)	
		농림어업직	275 (35.5)	75 (29.1)	
		기능원·단순노무직	210 (27.1)	95 (36.8)	
특 성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346 (44.4)	119 (45.0)	1.805
		고용주/자영업자	245 (31.4)	91 (34.5)	
		무급가족종사자	189 (24.2)	54 (20.5)	
	근속년수(년)		31.3 (17.1)	22.8 (10.8)	-8.847***
	직업 종료 당시 연령(세)		63.0 (7.6)	56.8 (5.3)	-13.691***
	월평균 임금(천원)		1327.1 (1332.6)	823.7 (712.4)	-6.504***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생애직업을 종료할 당시 연령이 56.8세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63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생애직업을 이탈하여, 연결직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갖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은퇴경로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자발적으로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칠 것으로 계획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정년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생애직업을 벗어나 연결직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기은퇴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생애직업을 조기에 은퇴한 근로자가 연결직업을 통해 근로를 지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두 집단 간 생애직업에서의 월평균 임금 역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약 133만원,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약 82만원 정도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 평균임금수준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애직업 월평균임금수준은 이들의 자산축적 등에 영향을 미쳐 생애직업 이후 연결직업을 통한 근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특성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의 산업분포는 농림어업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비스업(16.5%), 광공업(13%), 건설업(6.9%), 전기·운수·통신·금융업(6.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결직업의 산업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17.7%), 농림어업(17%), 광공업(15.5%)순이었고,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각각 7.9%로 가장 비중이 낮았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직업분포를 살펴본 결과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 기능원·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았다. 생애직업은 기능원·단순노무직(42.4%), 농림어업직(33.5%), 전문·관리직(13.4%), 사무·판매·서비스직(10.7%)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연결직업의 경우 과반수 이상(65.2%)이 기능원·단순노무직에 종사했으며, 농림어업직(13%), 사무·판매·서비스직(12.1%)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전문·관리직은 9.7%로 가장 비중이 낮았다.

고용형태는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모두 임금근로자가 각각 45%와 6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표 7>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특성 비교¹⁾

(n=265)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표준편차)		t/X ²	
		생애직업	연결직업		
일자리 특성	산업	농림어업	86 (33.0)	45 (17.0)	32.564***
		광공업	34 (13.0)	41 (15.5)	
		건설업	18 (6.9)	21 (7.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 (6.1)	21 (7.9)	
		도소매·음식·숙박업	64 (24.5)	47 (17.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3 (16.5)	90 (34.0)	
	직업	전문·관리직	30 (13.4)	24 (9.7)	34.365***
		사무·판매·서비스직	24 (10.7)	30 (12.1)	
		농림어업직	75 (33.5)	32 (13.0)	
		기능원·단순노무직	95 (42.4)	161 (65.2)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119 (45.0)	180 (67.9)	30.876***	
	고용주/자영업자	91 (34.5)	63 (23.8)		
	무급가족종사자	54 (20.5)	22 (8.3)		
근속년수(년)		22.8 (10.8)	7.1 (5.4)	-19.080***	
직업 종료 당시 연령(세)		56.8 (5.3)	65.0 (6.3)	21.644***	
월평균 임금(천원)		823.7 (712.4)	1042.7 (1167.9)	2.764**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셀(cell)의 빈도합이 다를 수 있음.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근로자들의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생애직업에서 평균 22.8년 근무하고, 연결직업에서는 평균 7.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직업을 종료할 당시의 연령은 생애직업이 평균 56.8세, 연결직업은 평균 65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근무 종료연령인 평균 63세보다 높아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더 늦은 시기에 완전은퇴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수준은 생애직업이 약 82만원으로 연결직업(약 104만원)에 비해 임금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3)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간 산업·직업·고용형태의 이동 분포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에 산업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에서의 산업 이동분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광공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산업유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생애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의 주된 산업 이동유형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산업군별로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에 산업의 이동 여부를 측정하고,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의 산업유지율을 각 산업군별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에서 같은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67.4%로 가장 높았고, 광공업(58.9%)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56.3%)에서의 산업유지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의 산업유지율은 22.2%로 산업군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8>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산업 이동 분포

생애직업	이동여부	연결직업	빈도(%)
산업	비이동	농림어업	32 (37.2)
		광공업	11 (12.8)
		건설업	9 (10.5)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 (3.5)
		도소매·음식·숙박업	12 (1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 (22.0)
	이동	농림어업	1 (2.9)
		광공업	0 (0.0)
		건설업	0 (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 (0.0)
		도소매·음식·숙박업	6 (17.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 (20.6)
	비이동	건설업	4 (22.2)
		농림어업	1 (5.6)
		광공업	0 (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 (5.6)
		도소매·음식·숙박업	2 (11.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 (55.5)
	이동	농림어업	0 (0.0)
		광공업	1 (6.2)
건설업		2 (12.5)	
도소매·음식·숙박업		1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 (18.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9 (56.3)	
비이동	도소매·음식·숙박업	23 (35.9)	
	농림어업	6 (9.4)	
	광공업	6 (9.4)	
	건설업	6 (9.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 (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 (31.2)	
이동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9 (67.4)	
	농림어업	5 (11.6)	
	광공업	3 (7.0)	
	건설업	0 (0.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 (9.3)	
	도소매·음식·숙박업	2 (4.7)	

다음으로 생애직업과 연결직업 사이에 산업 이동이 있었던 경우 각 산업군별로 산업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산업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애직업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던 경우 연결직업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2%)으로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14%), 광공업(12.8%), 건설업(10.5%)순으로 산업이동 유형을 보이고 있었다. 생애직업에서 광공업에 종사하였던 경우는 연결직업에서 역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6%)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의 이동은 보이지 않았다. 생애직업에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경우는 연결직업에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55.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생애직업에서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종사하였던 경우 역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8.8%)으로 이동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생애직업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종사하였던 경우는 연결직업에서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35.9%) 못지않은 비율(31.2%)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산업유지율이 가장 높았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생애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의 이동에 있어 농림어업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11.6%로 나타났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과 연결직업에서의 직업 및 고용형태의 이동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직업 유지율은 기능원·단순노무직이 9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고, 전문·관리직과 사무·판매·서비스직이 각각 46.4%와 44.5%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직업 이동유형으로는 생애직업에서 전문·관리직에 종사하였던 경우 연결직업에서 기능원·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39.4%)이 가장 많았고, 생애직업에서 농림어업직에 종사하였던 경우 역시 기능원·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이 5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능원·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직업과 고용형태 이동 분포

	생애직업	이동여부	연결직업	빈도(%)
직업	전문·관리직	비이동	전문·관리직	13 (46.4)
			사무·판매·서비스직	2 (7.1)
		이동	농림어업직	2 (7.1)
			기능원·단순노무직	11 (39.4)
	사무·판매·서비스직	비이동	사무·판매·서비스직	12 (44.5)
			전문·관리직	5 (18.5)
		이동	농림어업직	5 (18.5)
			기능원·단순노무직	5 (18.5)
	농림어업직	비이동	농림어업직	25 (36.3)
			전문·관리직	2 (2.9)
		이동	사무·판매·서비스직	3 (4.3)
			기능원·단순노무직	39 (56.5)
기능원·단순노무직	비이동	기능원·단순노무직	84 (92.3)	
		전문·관리직	2 (2.2)	
	이동	사무·판매·서비스직	3 (3.3)	
		농림어업직	2 (2.2)	
고용형태	임금근로자	비이동	임금근로자	95 (79.8)
		이동	고용주/자영업자	20 (16.8)
	무급가족종사자		4 (3.4)	
	고용주/자영업자	비이동	고용주/자영업자	23 (25.3)
		이동	임금근로자	61 (67.0)
	무급가족종사자		7 (7.7)	
	무급가족종사자	비이동	무급가족종사자	11 (20.4)
		이동	임금근로자	23 (42.6)
고용주/자영업자	20 (37.0)			

다음으로 고용형태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로는 임금근로자에서의 고용형태 유지율이 79.8%로 고용주/자영업자의 고용형태 유지율(25.3%)과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형태 유지율(2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의 이동 유형으로는 고용주/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동 유형이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생애직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였던 근로자는 연결직업에서 임금근로자로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비중이 42.6%, 고용주/자영업자로의 변화를 보이는 비중이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에서 고용주/자영업자로의 변화는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일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 창업으로의 직업 전환을 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장지연(2003)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창업을 통한 점진적 은퇴경로는 아직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은퇴경로의 유형을 종속변수(점진적 은퇴경로 = 1, 전통적 은퇴경로 = 0)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과 경제적 특성(가계총지출액, 순자산 총액, 부채 총잔액, 공·사적 이전소득 유무) 및 생애직업 특성(직업, 고용형태, 근속년수, 임금, 종료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은퇴경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부채 총잔액, 공적이적소득 유무, 생애직업 임금 및 생애직업 종료연령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중노동시장론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높은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으로 특징지어진 1차 노동시장과 불안정고용 및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진 2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차별과 장애가 많다고 보고있다(김지경, 2005).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한 직업에서 오랫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직업이동을 거쳐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간헐적인 노동참여 형태를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이동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50대보다 60대와 70대가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점진적 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1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지은정(2006)의 연구결과 및 58-62세의 근로자들은 경력직업에서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50세-57세의 근로자들은 경력직업(career job)에서 연결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Quinn(1996)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연령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지은정(2006)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가능성 및 신체능력, 근로욕구, 재정적 필요성 등이 더욱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을 위한 근로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노동시장 이동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특성 중에서는 부채 총잔액이 많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위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은퇴경로 선택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상환해야 하는 부채 총잔액이 많은 경우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시기를 지연시

키고 근로를 계속하여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공적이전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대체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후의 근로를 지속하려는 욕구를 감소시켜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이는 이전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이 높을수록 퇴직 후 경제활동 참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문일(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생애직업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애직업에서의 임금수준과 생애직업 종료연령이 은퇴경로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생애직업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고, 생애직업 종료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직업에서의 높은 임금은 저축과 투자여력을 높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나 퇴직금과 같은 기업연금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진적 은퇴경로 선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생애직업 종료연령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본다면, 생애직업을 그만둘 당시의 연령이 낮을수록 근로소득 없이 보내야 할 노후생활기간이 증가하고, 충분한 노후의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인 은퇴경로를 택해 은퇴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 -

종속변수		점진적 은퇴경로 = 1, 전통적 은퇴경로 = 0		
독립변수(괄호 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e)		odds ratio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여성)			
	남성	-1.794***	(0.391)	0.166
	연령 (50대)			
	60대	-1.671**	(0.542)	0.188
	70대이상	-3.392***	(0.662)	0.034
	교육수준 (무학)			
	초·중졸	-0.089	(0.337)	0.915
	고졸이상	0.652	(0.460)	1.920
배우자유무 (없음)	있음	0.571	(0.350)	1.769
	건강상태	0.108	(0.075)	1.114
경제적 특성	가계총지출액	-1.74E-005	(1.01E-005)	0.999
	순자산 총액	-4.85E-007	(6.32E-007)	0.999
	부채 총잔액	6.60E-006**	(2.09E-006)	1.000
	공적이전소득유무 (없음)			
	있음	-1.345***	(0.377)	0.261
사적이전소득유무 (없음)	있음	0.300	(0.298)	1.351
	생애직업 특성	직업 (기능원·단순노무직)		
전문·관리직		-0.180	(0.428)	0.835
사무·판매·서비스직		-0.029	(0.388)	0.972
농림어업직		0.751	(0.513)	2.120
고용형태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0.364	(0.287)	0.695
근속년수		-0.015	(0.013)	0.985
입급		-0.001***	(0.000)	0.999
종료연령	-0.320***	(0.035)	0.726	
상수		21.438 (2.465)		
chi-square		286.196***		
-2log likelihood		431.699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중·고령 근로자에게 있어 은퇴는 심리적·재정적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개인적·사회적으로 은퇴에 관해 다양한 관심과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은퇴연구가 주로 은퇴 의사결정과 은퇴 시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의 은퇴에 관한 연구들은 어떻게 은퇴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은퇴의 시기뿐만 아니라 은퇴과정, 은퇴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조기은퇴 현상의 심화로 개인의 은퇴 후 생활 보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은퇴과정과 은퇴유형을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은퇴는 정형화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 한 번의 전환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근로자로 하여금 은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은퇴를 지연시켜 은퇴 전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근로자 스스로 은퇴 후의 삶의 재정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점진적 은퇴경로가 제도화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적 부담을 간접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 근로자의 다양한 은퇴경로 중 점진적 은퇴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한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생애직업(career job)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며, 나아가 근로자들이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중보다는 여성이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성별분포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평균 연령은 68.3세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평균 연령인 69.7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연령대별 분포로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이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중이 87%이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60대와 70대 이상의 비중이 94%인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에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은 공적이전소득이 약 335만원이었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약 172만원으로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공적이전소득을 수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각각 약 372만원과 약 457만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이전소득의 유형에 따른 액수의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으로부터의 노후소득원이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가족원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집단 간 자산 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의 순자산 규모는 약 2억 1,65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약 1억 2,410만원으로 나타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간 생애직업(career job)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분포에 있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모두 농림어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 상 고령자의 대부분이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전통적 은퇴집단 내의 비중이 3.8%로 점진적 은퇴집단(6.1%)보다 더 낮았다. 두 집단 간 직업분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 내에서는 농림어업직이 3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 내에서는 기능원·단순노무직이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은퇴경로의 결정에 직업적 특성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생애직업에서의 근속년수는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31.3년)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22.8년)에 비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수준도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약 133만원)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약 82만원)에 비해 더 높았다.

넷째, 중·고령 근로자들이 전통적 은퇴경로와 점진적 은퇴경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보다 남성이, 50대에 비해 60대와 70대 이상이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부채 총잔액이 많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집단보다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집단이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또한 생애직업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생애직업 종료연령이 높을수록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통해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가진 특성을 조명하고, 이들 집단의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정

보제공 및 방향모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 비해 점진적 은퇴과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은퇴자들이 점진적 은퇴과정을 통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은퇴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한 집단과 점진적 은퇴경로를 통해 은퇴한 집단 간 인구사회학적·경제적·일자리 특성에서 몇 가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과 비교해보았을 때,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상대적으로 열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두 집단 간 성별에 따른 차이, 경제적 특성의 차이, 직업적 특성의 차이를 그 증거로 들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인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의 격차 및 은퇴경로 선택의 자발성과 관련지어 결과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분절화 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고용의 불안정성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연결직업(bridge job)을 가지게 되어 비자발적으로 점진적 은퇴과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생각해보았을 때, 성별에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점진적 은퇴경로를 선택한 근로자는 은퇴 후에도 낮은 경제적 지위로 노후보

장방안에 있어 상당히 취약함을 보일 것이고, 특히 여성은퇴자 가구가 더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의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은퇴 후 소득(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자산, 부채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경제적 특성을 지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쳤다는 것은 한 직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았음을 의미할 수 있고, 안정된 직업경력을 통해 공적연금과 충분한 자산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애직업에서 은퇴 후 연결직업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 전통적 은퇴경로를 거쳐 완전히 은퇴에 이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은퇴 전 근로기간동안 충분한 노후재정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결직업 선택을 통한 근로의 지속으로 소득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이 노후소득원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고연령까지 근로를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득, 자산수준은 전통적 은퇴경로 집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공적이전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노후의 지속적 소득원 창출 방안과 공적연금부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경우는 생애직업 기간 동안 여타의 공적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충분한 노후재정 마련을 위한 저축 여력이 없었던 근로자이다. 영세자영업자,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종사자,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오랜 기간 근로활동을 지속한 근로자의 경우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집단으로 이들에게 있어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실업급여의 현실적 조정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은 생애직업 및 연결직업에서 농림어업직이나 기능원·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했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이들의 노후보장방안은 대체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적 방안과 개인적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이미 오래 전에 은퇴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어려운 경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는 여전히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나, 아직 은퇴하지 않은 근로자나 현재 점진적 은퇴경로를 거치고 있는 집단에 있어서는 근로지속방안이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고령자 취업지원기관의 확대 등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장려하여 소득상실 기간을 최소화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같은 부분은퇴제도와 부분연금제도의 동시 운영,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년연장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등의 현실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임금이 최고점에 다다른 후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를 보장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은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이고(장지연, 2002), 부분연금제도는 연금수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소득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감소된 소득을 부분연금으로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Kalish & Aman, 1998; 지은정, 2006에서 재인용). 이 두 가지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일정부분 상실된 소득을 부분연금의 지원을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기업과 국가의 부담도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포함되어있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되었던 은퇴자들의 경우 과거 근로경험이 은퇴 전 마지막 일자리와 마지막

직전 일자리에 대한 정보만 파악할 수 있어, 은퇴경로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생애직업 이후 2가지 이상의 연결직업을 거친 근로자들은 연구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 또한 생애직업(career job)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점진적 은퇴경로 집단의 생애직업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를 보유한 응답자만을 추출하게 되어, 상당수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은퇴의 시기나 경로 및 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은퇴 결정 당시의 배우자의 직업 혹은 근로여부, 은퇴 당시의 부양가족원수 등의 변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으나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은퇴 당시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직업(bridge job)을 통한 점진적 은퇴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단축과 같은 점진적 은퇴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발적으로 은퇴경로를 선택한 집단과 비자발적으로 은퇴경로를 선택하는 집단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경로 선택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은퇴경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살펴본다면 더 많은 제언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국민일보(2006년 10월 8일자). 5070 일하는 노년을 위하여, ①기업이 나선다.
- 국민일보(2008년 2월 18일자). 늙어가는 대한민국, 25~49세 생산인구 2008년부터 줄어든다.
- 권문일(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 후 근로행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권승·황규선(2004). 노년층의 은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거주지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3), 69-90.
- 김지경(2004).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원천. KLIPS Research Brief, 8,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 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박경숙(2001).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 과정의 다양성. 노동경제논집, 제24권(1), 3, 177-205.
- _____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비취업 경계에 대한 함의.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71-303.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5).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안종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논집, 27권 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 이상호(2004). 고령자의 재취업 실태. KLIPS Research Brief, 9,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원(2006). 정년은퇴 여부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정년은퇴 결정 요인에

-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0, 71-99.
- 이승렬·최강식(2007). 국민연금이 중고령자의 은퇴 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4호, 83-103.
- 이현기(2003). 노년기 조기퇴직과 경력마감 형태 : 남성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2, 2, 33-61.
- 장지연(2002).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 _____ (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제37집 2호, 95-121.
-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3, 8, 135-168.
- 통계청(200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결과 보도자료.
- Flippen, C. A.(2005). Minority workers and pathways to retirement. in The New Politics of Old Age Policy, edited by Robert B. Huds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29-156.
- Fullerton, H. N.(1999). Labor force participation: 75 years of change, 1950-58 and 1998-2025. Monthly Labor Review, 122(December), 3-12.
- Gustman, A. L. & Steinmeier, T. L.(1986). A Structural Retirement Model. Econometrica, Vol. 54, No. 3, May, 555-584.
- Haejeong Kim & Sharon A, DeVaney(2005). The Selection of Partial or Full Retirement by Older Workers.
- Hayward, M. D. & Hardy, M. A.(1985). Early retirement processes among older men: Occup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7(4), 491-515.
- Honig, M.(1996). Retirement expectations: Differences by race, ethnicity

- and gender. *The Gerontologist*, 36(3), 373-382.
- Quinn, J. F.(1981). The Extent and Correlates of Partial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1, 634-643.
- _____ (1996). The Role of Bridge Jobs in the Retirement Patterns of Older Americans in the 1990s.
- Quinn, J. F., R. V. Burkhauser & D. A. Myers.(1990).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Kalamazoo, MI: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Ruhm, C. J.(1990).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8, No.4 (Oct), 482-501.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Older Worker's Retirement Pathways

- Traditional Retirement vs. Gradual Retirement -

Kim, Yeon Ju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variety of retirement types and processes are the major interest to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in these days. Because the population continues to age and the early retirement trend increases,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in retirement process. Gradual retirement is the one of them, the importance of it continues to increase. As gradual retirement process makes the older workers can secure their life after the retirement on their own. This is the reason why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have to support the gradual retirement process. So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radual retirees compared to traditional retirees and the determinants of selecting gradual retirement pathways.

This study compared demographic, economic and career job characteristics between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gradual retirement group. From the 2005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780 traditional retirees and 265 gradual retirees were selected. A t-test, chi-squares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as comple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are gender and ag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gradual retirement group.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a high proportion of male workers and older worker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Second,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higher level of public transfer income tha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but private transfer income level is lower tha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s well,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low level of net worth compared to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In general,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has more income, assets, and less debt than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refore their financial structure is comparatively stable.

Third, the differences of career job characteristics has been found betwee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and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re is a large percentage of the blue-color workers(e.g. technical service, repair, operatives) in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The gradual retirement group has worked for short period on their career job and has lower level of wage rate than the traditional retirement group.

Fourth, male workers, age 60s and 70s, the worker who has not a public transfer income, higher level of income in career job, and as older when they complete their career job are less likely to retire gradually. And as they have higher level of debt, the probability to select a gradual retirement routes is high.